
코로나 이후, 미래교육 전환을 위한
10대 정책과제(안)

2020. 10. 5.

교 육 부

목 차

I. 추진배경	1
II. 논의경과	2
III. 미래교육 전환을 위한 정책 방향	3
IV. 미래교육 전환 10대 정책과제(안)	4
< 유·초·중등교육 >	
1. 미래형 교육과정을 마련하겠습니다.	
2. 새로운 교원제도를 만들어 가겠습니다.	
3. 학생이 주인이 되는 미래형 학교를 만들겠습니다.	
4. 학생 성장을 지원하는 교육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.	
< 고등·평생교육 >	
5. 협업·공유를 통한 대학지역의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.	
6. 미래사회 핵심 인재를 양성하겠습니다.	
7. 고등 직업교육을 내실화 하겠습니다.	
8. 전 국민의 전 생애 학습권을 보장하겠습니다.	
< 기반 구축 >	
9. 디지털 전환에 대응한 교육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.	
10. 미래형 교육 협력 거버넌스로 개편하겠습니다.	
V. 향후 추진계획(안)	31

I. 추진 배경

- 4차 산업혁명, 디지털 전환(digital transformation), 인구구조 변화 등에 따라 사회·경제 전 분야에 걸친 변화 가속화 및 불확실성 심화
 - ※ 지식·정보 유통기한 단축, 근로형태 다양화, 기존 학위·자격의 효용성 상실 등
- 지식 암기에서 벗어나 자기주도적으로 새로운 지식·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창의성, 협업능력 등을 갖춘 미래인재 양성의 중요성 대두
 - ※ 세계경제포럼(WEF)은 미래사회 핵심역량으로 4C 제안(비판적 사고력 Critical thinking, 창의력 Creativity, 협업능력 Collaboration, 소통능력Communication)
- 전 세계적 경기침체의 장기화 예상 속에서, 계층 간 이동성 약화 및 사회적 불평등은 교육격차를 더 심화시킬 것이라는 우려
 - 기존의 생산성·효율성 중심의 목표에서 벗어나, 사회적 연대와 민주적 협력을 통해 '모두를 위한 삶의 질'을 구현하는 교육체제 필요
-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교육 현장의 혁신적 변화를 기반으로 미래교육으로 도약해야 한다는 사회 전반의 공감대 확산
 - 원격수업으로 수업의 개방성이 높아지고 다양한 실험적 교육방식*을 시도하면서 첨단 기술을 활용한 교육혁신 가능성에 대한 기대 증가
 - * (예) 격일제 등교(2일 등교 + 3일 원격), 일 단위 블렌디드 러닝(오전 등교 + 오후 원격) 등
 - 교육의 공간이 확장되고 디지털 인프라를 활용한 다양한 수업이 가능해지면서 미래 학교와 교원의 역할에 대한 근본적 질문 제기
 - ※ “교육=학교교육=등교수업”의 인식이 깨지고, 지식 전달자를 넘어선 교원의 새로운 역할, 인간적 유대감에 기반한 공동체로서의 학교 중요성 부각 등

⇒ 4차 산업혁명 및 디지털 전환 등 사회적 혁신을 기반으로, 모두를 위한 삶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 교육 패러다임 대전환 필요

II. 논의 경과

□ 현장·전문가 등과 광범위한 소통·대화

- 미래교육위원회(제1기 : '19.2~12월, 제2기 : '20.6월~)
 - 각 분야 창의적 현장 전문가, 전체·분과회의, 현장 간담회 등
 - 미래교육 준비를 위한 분야별 민·관 합동 TF('20.4월~)
 - 관련 부서 및 전문가 등으로 작업반 구성, 분야별 과제 준비
 - 한국형 원격교육 정책자문단('20.4월~)
 - 에듀테크 산업계, 학생·교사, 유관기관 등 회의(4회) 및 자문
 - 포스트 코로나 교육 대전환을 위한 대화('20.6~8월)
 - 정책 분야별 현장과의 열린 대화 9회, 권역별 지역포럼 4회 등
- ⇒ 배움과 성장의 ①지속성, ②포용성, ③자율성, ④선제적 미래 대응, ⑤학생의 안전·건강을 미래교육 방향으로 제시

□ 분야별 정책 방안 수립

- △ 시·도교육감협의회 합동, 「포스트 코로나 시대 미래교육 방향」(7.9.)
- △ 국가교육회의 등 합동 「미래지향적 고등·직업교육 공동 선언」(7.10.)
- △ 시·도교육감협의회 합동, 「교육 안전망 강화 방안」(8.11.), 「보완 방안」(9.15.)
- △ 교육부, 「디지털 기반 고등교육 혁신 지원방안」(9.9.)
- △ 관계부처 합동 「디지털 시대의 열린 평생교육·훈련 혁신방안」(9.23.)

□ 미래교육 전환을 위한 “디딤돌” 과제 준비

- 현장·전문가 의견 및 발표한 정책 등을 바탕으로 미래교육 전환을 위한 10대 정책과제(안) 준비
 - 중기(~'23년) 추진 필요과제를 중심으로 정책과제를 마련하고,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장기과제는 논의의 방향 등 제시

Ⅲ. 미래교육 전환을 위한 정책 방향

비전

코로나 이후 시대 **미래교육 전환**

목표

미래교육체제 준비를 위한 “디딤돌” 과제 구체화

전략
및
과제

[유·초·중등교육]

국가 책무성 및 현장 자율성 강화

- ① 미래형 교육과정 개편
- ② 새로운 교원제도 마련
- ③ 학생 중심 미래형 학교 조성
- ④ 성장 지원 교육안전망 구축

[고등·평생교육]

공유와 협력을 통한 혁신 지원

- ⑤ 협업·공유를 통한 대학지역의 성장
- ⑥ 미래사회 핵심 인재양성
- ⑦ 고등 직업교육 내실화
- ⑧ 전 국민, 전 생애 학습권 보장

[기반구축] 미래 변화에 선제적 대응

- ⑨ 디지털 전환 교육 기반 마련 + ⑩ 협력적 교육 거버넌스 구축

핵심
가치

지속성 + 포용성 + 자율성 + 안전과 건강

IV. 미래교육 전환 10대 정책과제(안)

“유·초·중등교육의 국가의 책무성과
현장의 자율성을 강화하겠습니다.”

[과제 1] 미래형 교육과정 마련

추진 방향	주요 내용
교원·학생 중심 제도 개선	(2022 개정 교육과정) 분권, 자율, 다양성, 공공성 강화 (고교학점제) 학사제도 개선, 공간조성 등 준비 철저 (중등 직업교육) 실습환경 개선, 사회진출 기회 확대 등 (교과서) 온라인 교과서 등 ‘만들어 가는 교과서’ 체제

[과제 2] 새로운 교원제도 논의 추진

교원제도 혁신	새로운 교원 양성체제 개편 논의 추진 미래 수요에 대응한 적정규모 교원수급 추진 학교 변화를 교원이 주도할 수 있도록 교원정책 혁신
---------	---

[과제 3] 학생이 주인이 되는 미래형 학교 조성

미래형 학교 구현	민주적 학교 모델 구현 미래형 혁신학교,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
-----------	---

[과제 4] 학생 성장을 지원하는 교육안전망 구축

교육안전망 강화	교육적 배려 필요 학생 지원(교육복지) 국공립 유치원 확대 및 서비스 질 개선 학습격차 해소 및 기초학력 책임 보장
----------	--

1. 미래형 교육과정을 마련하겠습니다.

1 미래형 교육을 위한 「2022 개정 교육과정」 개편 본격 추진

- (미래형 교육) 미래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른 교수·학습 및 평가 개선, 교육과정 분권화·자율화, 원격수업 경험 반영 등 미래형 교육기반 확대
 - 특히, '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에 따라 학생 스스로 진로를 설정하고 개척하는 고교학점제형 교육과정 도입 추진

< 교육과정 개정 추진 방향(안) >



- (추진 방안) 교육부, 국가교육회의, 시·도교육감협의회, 관계기관 및 범부처 TF 등의 논의를 중심으로 국가교육과정 개정 추진
 - (추진 일정) 기초연구('20) → 주요 개정 사항 발표('21) → 개정 교육과정 고시('22) → 적용(초: '24 / 중·고: '25)

2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을 위한 차질 없는 준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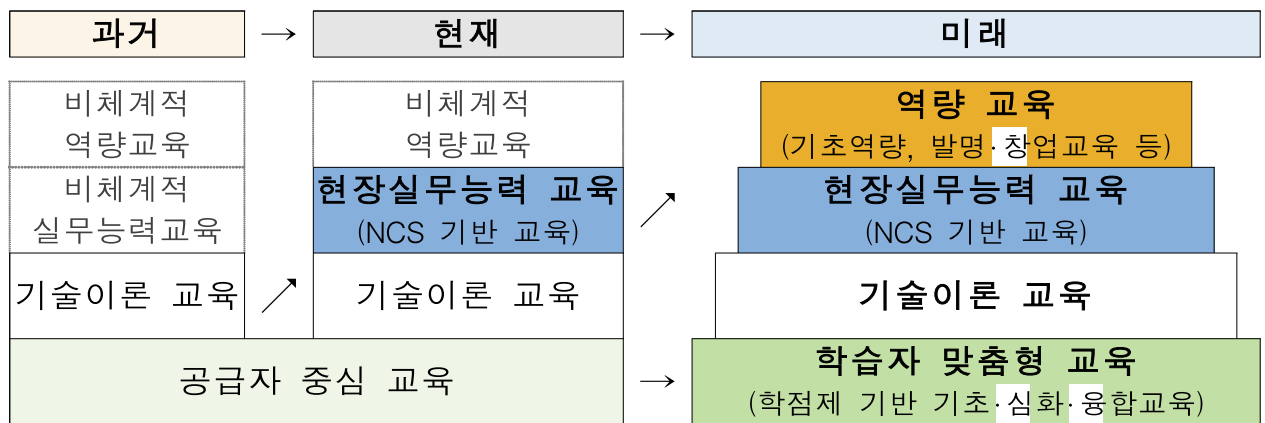
- (학점제형 교육체제) 고교 수업량 기준을 '단위'에서 '학점'으로 전환하고, 총 이수학점 적정화 및 학생 선택 중심 과목구조 개편
 - ※ ('20) 종합계획 수립 → ('22) 특성화고 학점제 도입, 일반계고 부분 도입 → ('25) 학점제 본격 시행
 - 학점을 기준으로 고등학교 학사 체제를 개선하고, 「초·중등교육법」 개정을 통해 고교 교육과정 운영 제도로서 학점제의 법적 근거 마련
- (자기주도적 학점 이수 지원) 학생 수요에 기반한 과목 개설, 수강신청을 통한 개인별 시간표 편성 등 자기주도적 학습경험 환경 제공
 - ※ (~'22) 고교학점제 수강신청 시스템 운영 → ('23~) 4세대 나이스 수강신청 기능 활용

- 고교학점제 연구·선도학교를 중심으로 에듀테크 기반 선도고교 지정 및 온라인 공동교육 거점센터 운영 등 미래교육 모델 구현 기반 마련
- (학점제 지원체제 구축) 학교 밖 전문가를 교수자원으로 활용하고, 교과 순회교사제 도입 등을 통해 학점제 운영 지원을 위한 교·강사 탄력적 배치
 - ※ '21년 중등교원 정원 배정 시 교육지원청에 교과순회교사 배치 예정
- '교과교실제', '학교공간혁신' '그린 스마트 미래학교' 사업 등을 통해 '25학년도 전까지 고등학교의 학점제형 학교공간 조성 추진

3] 중등 직업교육 고도화

- (맞춤형 교육) 직업계고에 '24년까지 학점제 도입 완료*' 등 학생 개개인의 '성장'을 지원하는 직업교육 체제 구축
 - * ('20) 마이스터고 1학년 → ('22) 마이스터고 전학년, 특성화고 1학년 → ('24) 특성화고 전학년
- 진로 기반 진단평가 등 학생별 맞춤형교육을 실시하고, 학생 수요에 따라 기초·심화·융합교육 제공하는 교육과정 개발(~'22)

< 직업계고 교육과정 개선 흐름 >



- 학교의 자발적 혁신 지원을 위해 '특성화고 혁신지원 사업' 확대·추진* 및 학과(매년 100개 이상) 개편을 지원하여 직업교육 경쟁력 제고
 - * ('20) 200개교 지원 → ('22) 300개교로 확대
- (실습환경 혁신) 노후화된 직업계고 공간을 혁신*하고 실습시설·기자재 개선 등 안전한 실습환경을 구축하여 직업계고 매력도 제고
 - * (예) 학점제와 연계한 교과교실, 발명 공간, 안전한 실습실, 명장공방, VR실 등

- 직업계고 **공동실습소 환경 개선 및 운영체제 개편***을 통해 직업 교육의 공간적 저변 확대 추진
 - * (기존) 학교에서 관리하여 개방성 저하 → (개선) 교육청 관리를 통해 개방성 강화
- (사회진출기회 확대) 학교에 취업지원 역량을 강화하고 학생의 안전과 권익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현장실습 활성화 추진
 - 취업지원관 확대(~'22, 1,000명), 취업전담교사제 도입, 중앙취업 지원센터 활성화를 통해 취업지원역량 지속 확대
 - 현장실습지원금(월 60만원), 고교취업연계장려금('20, 4백만원 → '21, 5백만원)의 지속적 확대를 통해 고졸자의 사회진출 및 초기안착 지원

4 교과서 패러다임 전환

- 기존 서책형에서 벗어나 디지털 콘텐츠를 활용한 '만들어 가는 교과서' 체제 조성을 위해 「온라인 교과서」 도입 추진
 - 태블릿PC로 디지털 콘텐츠(e-book, PDF 등)를 활용하고 온·오프라인 융합 교육 모델을 개발·확산하는 온라인 교과서 시범사업* 실시
 - * ('20.下) 선도학교 400교 → ('21) 800교(+400교) → ('22) 1,200교(+400교)
 - 교사의 전문성에 기반하여 교과서 개발·제공 형식을 다양화하고, 학교 여건에 따라 자율 선택하도록 제도 개선('21.下)

< 온라인 교과서 도입 전·후 비교 >

기준	현 재	개 선
형태	△ 고정된 지식을 담은 교과서	△ 변화하는 지식을 실시간 반영 가능한 교과서
개발 주체	△ 출판사가 만든 교과서를 수동적으로 사용	△ 교사가 최신 콘텐츠를 활용하여 교과서 저작
사용 방식	△ 서책 교과서 “의무 사용”	△ 서책·온라인 교과서 “자율 선택·사용”

5 미래형 유치원 교육과정 도입

- 2019 개정 누리과정의 방향에 부합하는 미래형 유아·놀이중심 유치원 교육과정 도입('21~)
 - 3~5세 유아를 위한 유아·놀이중심 교육과정에 디지털 환경 경험 반영
 - ※ 코로나 이후 융합형 유아교육에 대비, 유치원 원격수업 체제 및 기본 방침 제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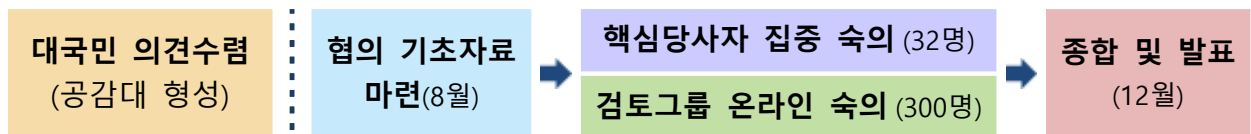
2. 새로운 교원제도를 만들어 가겠습니다.

1 새로운 교원 양성체제 개편 논의 추진

< 교원양성체제 개편 필요성 >

- △ (학교 변화) 학생 선택권 확대, 교육과정 자율성 강화, 학생 맞춤형 지원
- △ (초등교원 양성) 교육과정 다양성 확대, 안심학년제 등 새로운 역할 요구
- △ (중등교원 양성) 과잉 양성 해소, 교육실습 내실화, 복수교과 지도역량 등

○ (국가교육회의) 교원양성기관 개편 방향에 대한 사회적 협의 추진



- 대국민 의견수렴, 핵심당사자 집중 숙의, 객관적 여론 확인을 위한 검토그룹 온라인 숙의(300명) 등 병행

○ (교육부) 미래형 교원양성체제 구축을 위한 정책 추진

- 국가교육회의 사회적 협의 결과를 반영하여 ①현장 중심, ②미래 대응 교원 양성을 위한 「교원양성체제 개편 방안」 수립('21.上)
 - * 교육실습 강화, 복수교과 지도 역량, 양성기관 기능 특성화 등 검토
- (교원양성 교육과정 개편) 수업 전문성, 미래교육 역량, 현장 역량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방안 마련

- △ (수업 전문성) 복수전공 활성화, 표시과목 광역화 등
- △ (현장성) 현장 교원의 대학 교직강의 참여, 실습 강화(기관·형태 확대)
- △ (미래 역량) 미래교육센터 설치, AI등 교육강화, 표시과목 신설
- △ (인성·교직적성) 예비교원의 성인지 감수성 강화(의무화)

2 미래 수요에 대응한 적정규모 교원수급 정책 추진

- 어떤 상황에서도 지속가능하고, 한 학생도 뒤처지지 않도록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현장 수요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교원수급 모델 마련

- (지속가능 배움을 위한 환경 구축) 교사당 학생 수 등 양적 지표 외에 안전한 수업을 위한 적정 학급당 학생 수를 감안한 교원 수급
 - * 기존 지표(교사 1인당 학생수의 OECD 평균 도달)를 넘어서 한국교육이 미래교육을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새로운 교원수급 기준 마련
- (미래교육 전환 뒷받침) 교육과정 개편에 따른 수업형태 및 교수 학습 혁신, 고교학점제 등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다양한 수요 반영
- (교원 수급전망 체계화) 예측가능한 안정적 교원 수급관리를 위해, 통계청 인구추계와 연동하여 2년 단위로 향후 5년 수급전망 실시
 - ※ ('21) K-교육 선도형 교원수급전망모델 마련 → ('22) 중기('23~'27) 교원수급전망
- 정원 내에서 결원 대체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기간제교원 제도를 교육수요 변화에 따른 탄력적 교원수급을 위한 제도로 개선

3 학교 현장의 변화를 뒷받침하는 교원정책 추진

- (학교장 역량 강화) 학교 단위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관리자 임용을 위한 인사제도 개선 및 학교장 책무성 강화
 - ※ 교장자격 취득 관련 역량평가 도입, 교장 임용 및 중임 평가 강화 등
- (미래형 교사 직무분석) '지식전달자 → 학습촉진자·지원자' 역할 전환과 함께 새롭게 요구되는 교육활동*을 반영한 교사의 직무를 재구조화하여 교원인사제도 및 수급정책에 반영
 - * AI 교육, 콘텐츠 개발 담당교원, 고교학점제 학습상담교원, 기초학력 담당교원 등
- (교무 업무의 효율화) 전문화·다양화되는 교육활동에 대응하여 보직교사의 업무 전문성과 교사의 교육활동 전념도 제고 방안 마련
 - ※ AI를 활용하여 교무부장, 학생부장, 정보부장 등의 업무수행 지원 등

- △ (예 1) AI 전문교사 등 교원 자격에 표시 교과가 없는 분야의 경우 교원 양성이 될 때까지 관련 분야 전문가를 한시적으로 임용
- △ (예 2) 원격수업 장기화에 따른 기초학력 저하 예방 등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충분한 정원이 확보되기 전까지 기초학력 담당교사 등을 한시적으로 임용

3. 학생이 주인이 되는 미래형 학교를 만들겠습니다.

① 민주적 학교 모델 구현

- (학교 자율성 강화) 교육과정 운영, 예산 집행(학교운영비 등) 및 교원 인사 등에서 학교 단위 자율성 및 책무성 강화 방안 마련 추진
 - ※ 자연재해, 감염병 등 재난상황 시, 학교의 탄력적 학사운영 방안 마련
- (학생 참여 제도화) 학생회의 법적 근거 마련* 및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에 학생 대표를 포함하여 학생 참여의 실질적 보장 확대
 - * 「초·중등교육법」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계류 중('20.6월 ~)
 - 학생 회의실 환경 개선, 학생 참여 예산제 등을 통한 학생 주도 참여 경험 확대 및 학생자치 활동 지원
- (민주시민교육 체계화) 학교 민주시민교육의 개념, 가치, 역량 등의 「공통기준」 및 교육과정 운영방안 마련(~'20.12월)
 - 민주적 학교문화 확산 및 존중·자율·연대의 시민적 가치를 반영한 교육과정과 참여·협력형 수업을 실천하는 「민주학교」 운영(217교)

② 새로운 학교 모델 구현

- (미래형 혁신학교) 과감한 상상력으로 미래교육 운영모형을 시범 적용하는 미래형 혁신학교(21, 103개교)를 통해 혁신적 교육 사례 확산
 - 창의적 교육과정-수업-평가, 공간혁신, 지역 연계, 에듀테크 등 혁신학교의 성과 위에 공교육을 혁신하는 모델학교 수행 지원
 - ※ (예) 마을학교 연계 프로젝트형 학기제, 지역사회 자원 활용 학생 주도적 교육활동 등
- (그린 스마트 미래학교) 노후학교 개축 또는 리모델링을 통해 학생 안전 및 디지털 기반 유연한 교육과정 운영 등이 가능하도록 혁신
 - ※ '21년부터 5년 간, 개선 필요 노후시설 2,835동에 대해 18.5조원 투입

- 디지털 장비*, 정보통신 설비·비품, 스마트기기 등을 통해 미래형 교수·학습이 가능한 정보통신기술(ICT) 기반 스마트교실로 구축
 - * 전자칠판, 빔 프로젝트, 대형 TV, 부착·이동형 모니터 등
- (디지털 환경 조성) 학내 어디서나 디지털기기를 활용한 온·오프라인 융합 수업이 가능하도록 전체 초·중·고 교실*에 무선환경(Wi-fi) 구축
 - * ('20.6월) 8.1만실 → ('21.6월) 24.6만실(쑤 일반교실) → ('22) 전체 일반·교과·특별교실
- 도서관, 체육관 미술관 등 생활 SOC와 연계하여 학교가 주민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중심적인 기능을 담당하도록 설계
 - ※ (예) 학교 내 디지털 역량센터, 개방형 스마트 도서관, 스마트테크 센터 운영 등

3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 시설 및 교육환경 조성

- (안전한 환경 조성) 모든 교육시설 대상 안전점검(연 3회 이상), 안전성 영향평가 내실화 등 교육시설 상시 점검시스템 구축
 - 내진보강 조기 완료(당초 '34 → '29), 무석면 학교 실현(~'27) 및 미세먼지, 라돈 등 실내공기질 관리 강화
- (등·하굣길 안전) 학교 주변 교통안전 환경 조성 및 지도 강화
 -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 확대, 학교 내·외 안전한 보행로 확보,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관리 강화 등 지속 추진(행안부 협업)
 - ※ 무인 교통단속 장비 설치(~'22), 옐로카펫 확대(~'21, 1,000개교) 등 추진
- (미래세대 안전 급식 제공) 유치원 급식에 「학교급식법」 적용*('21) 및 영양(교)사 배치 기준 강화를 통해 위생·안전관리 강화
 - * 모든 국·공립유치원 및 50명 이상 사립유치원에 학교급식법 적용
- (학생상담 강화) 전문상담교사 정원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상담을 통한 학생 심리·정서적 지원 강화
 - ※ '일자리 정책 5개년 로드맵'(일자리위원회·관계부처 합동, '17.10월)과 연계하여 공립 전문상담교사 정원 확보: ('20) 2,508명 → ('25) 6,008명 목표

4. 학생 성장을 지원하는 교육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.

1 교육적 배려 필요 학생에 대한 지원 강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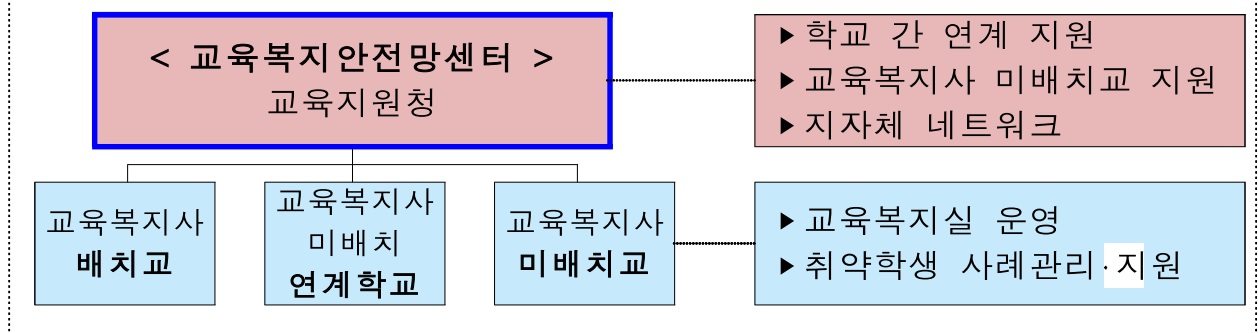
- (교육급여 개편) 항목 중심의 교육급여를 개개인이 필요한 교육 활동에 자율적으로 지출할 수 있도록 '교육활동지원비'로 통합('21)
 - 원격교육 및 가정단위 교육활동 등 새로운 교육활동 수요 증가에 따른 다양한 활용가능성을 고려하여 교육급여 보장수준 강화

구분	2020년(기존)	2021년(개편)
지원 항목	입학금·수업료·교과서비, 부교재비, 학용품비,	'교육활동지원비'로 통합지원 ※ 단, 고교 입학금·수업료·교과서비는 무상
연간 지원액	(초) 206천원, (중) 295천원, (고) 422.2천원	(초) 286천원, (중) 376천원, (고) 448천원

- (지역 중심 교육안전망 구축) 학습·정서·문화 등에서 소외되는 학생이 없도록 지역 내 안전망 구축을 통해 맞춤형 지원 추진
 - 사각지대 취약학생 사례관리·지원 등을 위해 교육지원청에 '(가칭)교육복지안전망 센터' 설치('21, 11개소 시범사업)

< (가칭)교육복지 안전망 구축 시범사업(안) 개요 >

△ (추진 내용) 지역 내 취약학생 복지 수요 발굴, 학습·정서·문화·복지 지원



2 국·공립 유치원 확대 및 서비스 질 개선

- (국·공립 확충) 유아교육 국가책임 강화를 목표로 '21년까지 매년 500학급 이상 확충 및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설립 유형 다양화*

* 공영형 8개원, 매입형 35개원, 부모협동형 2개원('20.9월 기준)

- (서비스 개선) 학부모가 질적 향상을 체감할 수 있도록 수요 맞춤형 방과후 돌봄 확대* 및 통학버스 단계적 확충**

* 학급 증설, 운영시간 및 참여 대상 확대, 연계 돌봄(공립 및 공·사립 간, 초등·지역 등) 활성화 등

** 농어촌·단설에 우선 지원하되, 시·도별 자체계획 수립 후 확대

3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 책임 보장

- (학습격차 해소 노력)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수업에 따른 학습격차 완화를 위해 등교수업 확대, 기초학력 부족 학생에게 소규모 대면 지도 추진, 교사-학생 간 소통 활성화 등 노력 계속

※ '교육 안전망 강화 방안'(20.8.11.) 등을 학생·학부모가 체감할 수 있도록 현장 안착 지원

- (기초학력 지원 체계 마련) 기초학력에 대한 국가-지자체 책무성 강화 및 체계적 지원을 위한 「기초학력 보장법」 제정 추진('20~)

※ 기초학력 진단검사, 기초학력보장위원회 설치, 종합(시행)계획 수립 및 전담기관 지정 등

- 기초학력 제도개선 연구, 컨설팅, 콘텐츠 개발 등 온·오프라인 지원 기능을 수행하는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 운영('21~, 10억원)

- (학교 중심 지원) 정규수업 등 학교교육을 통한 기초학력 지원 강화

- '기초학력 집중지원 담당교원' 확보를 통해 협력수업을 중심으로 기초학력 진단, 두드림학교 등 기초학력 중점 지원('21, 초등)

- 신도시 등에서 발생하는 과밀학급 해소 노력을 통해 기초학력 책임 교육 및 교수학습 혁신 지원

- 원격수업·자율학습이 가능한 온라인 콘텐츠(기초학력진단-보정시스템의 배·이·스·캠프) 개선·확대*로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

* ('20) 초·중·고 문항 22,000개, 강의영상 200개 → ('21) 문항 25,000개, 강의 영상 300개, 자동문항생성 기능을 추가하여 유사문항 학습 지원

**“고등·평생교육이 공유와 협력을 통해
혁신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.”**

[과제 5] 협업·공유를 통한 대학·지역의 성장 지원

추진 방향	주요 내용
대학과 지역의 공유 성장 촉진	→ 규제혁신 및 대학 운영 자율성 확대 공유·성장형 지역고등교육 생태계 조성 국립대학을 지역 발전 거점으로 육성

[과제 6] 미래사회 핵심 인재 양성 지원

디지털 시대 인재 양성	→ 산업 수요를 반영한 실무인재 양성 학문 발전을 견인하는 석·박사급 고급인재 양성 디지털 가상캠퍼스를 통한 신기술 혁신인재 양성
---------------------	--

[과제 7] 고등 직업 교육의 내실화

미래 역량을 기르는 고등 직업교육	→ 대학생 진로 및 취업 지원 확대 재직자의 후학습 지원 강화 대학의 산업맞춤형 인력 양성 내실화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

[과제 8] 전 국민의 전 생애 학습권 보장

보편적 평생교육	→ 대학의 평생교육 기능 강화 「평생학습-직업훈련」, 「일-학습-삶」의 연계 강화 초고령사회 대비 은퇴노년층 교육 제도화 추진
-----------------	--

5. 협업·공유를 통한 대학·지역의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.

1 대학 운영 자율성 확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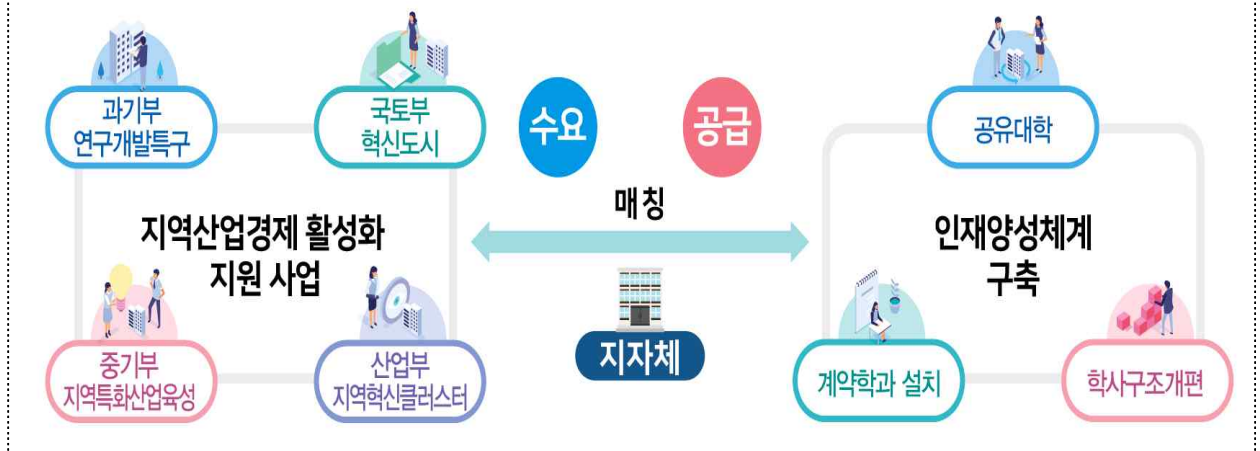
- (대학 규제 혁신) 원격교육 확산 및 일상화에 따른 교육과정, 교원, 학생정원, 학습장 등의 요건에 대한 근본적 개선 검토
 - ※ 「대학설립·운영 규정」의 4대요건 유지 필요성 등에 대한 연구 착수('21)
-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대면·비대면의 다양한 수업 활동이 가능하도록 원격수업 운영 관련 최소 기준만 제시, 자율적 운영 허용
 - ※ 원격수업 교과목 개설 기준(20% 이내) 폐지, 이수학점 제한 기준 완화 등
- (대학 간 공동교육과정) 대학별 강점 분야를 중심으로 교육과정 공유, 학점교류·학점인정 확대 및 권역 내 대학 간 복수·공동학위 활성화
 - ※ 거점국립대 간 (원격)학점교류 모델 시범운영 예정(9개교, '20.下)
- 국내대학 간 온라인 공동 석사학위 과정 및 국내대학과 외국대학 간 온라인 공동 학·석사학위 과정 운영 허용('21~)
- (유학생 유치 확대) 원격수업 규제 완화 등과 연계한 유학생 유치 전략 다변화를 위해 국내대학의 다양한 학사 운영 프로그램* 개발('21~)
 - * 학사(오프라인) + 석사(온라인)과정 등 다양한 방식의 온-오프라인 융합 교육, K-MOOC 등 우수한 원격교육 콘텐츠의 다국어 자막 지원 등
- 외국대학과 교육과정 공동 운영 시, 석사학위 뿐 아니라 온라인 학사과정 공동운영 허용 등 온라인 공동 교육과정 활성화 지원
- (연구·학술활동 지원) 대학의 전자저널 구독 예산 지원('21, 175억원), 온라인 학술대회 서비스 및 전자 학술지 발간 지원('21, 69억원) 등을 통해 대학 간 연구 여건 격차 완화
 - 연구자가 학술연구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, 교육학술 등 분야별로 생산·저장·관리 중인 국가 지식정보를 연계·통합*
 - * 디지털 집현전 플랫폼 구축(과기정통부 협업)

2 공유성장형 지역 고등교육 생태계 조성

- (지역혁신 플랫폼) 대학혁신에 기반한 지역혁신을 위해 지역대학과 지자체를 중심으로 지역 내 연구기관, 산업계 등 연계·협력 지원
 - 지역의 산업·일자리체계를 뒷받침하는 지역인재 육성체계를 구축하는 지역혁신 플랫폼을 제도화 및 확대하여 국가균형발전 도모
 - * ('20) 3개 지역(경남, 충북, 광주·전남) → ('24) 비수도권 전역으로 연차별 확대
 - ※ 「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」 개정 등 추진('20.下~)
- (대학 간 특성화 분야 연계) 개별 대학이 가진 강점을 결집하여 지역 핵심 분야의 혁신을 지원하는 “지역 공유대학” 모델 구축
- (일자리 연계체제 구축) 지역 내 대학-기업-공공기관-지자체 등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지역이 필요로 하는 인재 양성
 - ※ 지자체-대학 협력기반 혁신사업 확대, 부처별 국가균형발전사업과 연계 강화
 - 대학이 양성한 인재는 지자체가 동 클러스터 내에 취·창업 및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지역 내 인재 수요·공급 연계 완성

< 지역 산업 및 클러스터 연계 모델 >

△ (충북 사례) 지역의 바이오산업 기반에 맞추어 ‘바이오헬스 산업 인력 양성 체계’를 구축하여 지역인재 육성 → 지역 내 취·창업 → 지역 정착의 선순환 생태계 조성



- (고등교육 규제샌드박스 운영) 지역혁신 플랫폼이 구축된 지역 중 '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'을 지정·운영하여 규제완화 시범 적용

※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지정·운영 근거 마련을 위한 「지방대육성법」 개정 추진('20.下~)

3 국립대학을 지역 발전 거점으로 육성

- (국립대학의 공공성 및 경쟁력 강화) 취약계층 고등교육 기회 보장, 기초·보호학문 육성, 지역사회 기여 등 국립대학의 공공성 지속 확대
 - 국립대학의 경쟁력을 수도권 주요 대학 수준 이상으로 강화하기 위해 교육·연구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재정 투자 확대* 추진
- * (예) 디지털 인프라 개선, 실험실습 기자재 교체, 노후시설 개·보수, 전임교원 확보율 제고 등
- (국립대학 육성사업 확대·개편) 1주기('18~'22) 사업의 3년차 중간 운영성과를 점검('20)하여 '21년 이후 운영에 대한 심화·발전 방안 모색
 - 사업 성과 및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국립대학 육성사업 2주기('23~) 추진방향 마련('22.下)

< '국립대학 육성사업' 개요 >

△ (목적) 국립대학의 공공성 및 경쟁력 강화

△ (사업기간 및 예산) '18~'22년 / '20년 1,500억원

△ (주요 내용) 국정과제와 연계한 5대 중점 추진과제*를 설정, 각 과제별 국립대 고유의 역량 강화 사업을 자율적으로 기획·추진

* ①고등교육 기회 확대, ②기초·보호학문 및 특화 학문분야 육성, ③특화전략 및 발전 모델 구축, ④대학 협력 네트워크 활성화, ⑤지역사회 기여

- (대학 간 연계·협력 선도) 국립대학이 지역대학 간 연계·협력의 핵심 주체로서 대학 간 자원·역량 공유 및 협력 네트워크를 선도하도록 육성
 - 대학 간 공동의 교육혁신 추진을 위해 거점국립대에 원격교육·학점교류* 기반을 구축하고, 권역별 공동교육 혁신센터** 운영 추진
- * ('20) 거점국립대 시스템 구축 및 시범 운영 → ('21~) 타 대학으로 확산 추진
- ** (예) 호남·제주권 국립대 공학교육혁신센터 → 공동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교류 지원

6. 미래사회 핵심 인재를 양성하겠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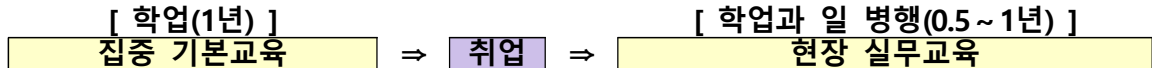
① 산업 수요를 반영한 실무인재 양성

- (현장 중심형 인재 양성) 산업 변화 등에 대응한 학과 개편, 산업 연계 교육과정 운영 등을 통해 산업 수요에 적합한 인재 양성
 - 산업계 직무 분석을 토대로 대학-기업 간 공동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취업연계 강화를 위한 기업맞춤형 신규 협약반* 운영('20~)
 - * 산학협력 선도대학 64개교에서 사회맞춤형학과 운영(일반대 20교, 전문대 44교)
 - 조기 학위 취득 및 입직 기회 확보가 가능한 '전문대 조기취업형 계약학과*' 확대('21 신규 5개교, 60억원)
 - * 전공기초능력 교육(1학년) 후 약정 기업에 취업 및 직무심화 교육을 병행(2학년)

< 전문대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교육모델(1.5년~2년) >

△ (1학년) 기업 맞춤형 전공 집중기본교육

△ (2학년) 현장실무 교육(대학·기업 공동 설계)



※ 필요 시 1, 2학년 집중이수를 통해 2학년 과정을 6개월로 단축하여 운영

- (고숙련 전문기술인재 양성)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고숙련 전문기술 인재 양성을 위한 새로운 교육모델인 '(가칭)마이스터대학' 도입 추진
 - 단기수료과정부터 전문학사, 전공심화과정(학사), 석사과정까지 학습자가 유연하게 진·출입할 수 있는 고도화된 교육과정을 개발·운영
 - ※ ('20) 정책연구 → ('21) 시범운영(4개 대학, 80억원) → ('23) 법령 등 제도개선

② 혁신 공유대학을 통한 신기술분야 핵심인재 양성

- 기존 전공에 관계 없이 희망하는 대학생 누구나 신기술 분야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기회 제공('21~, 연 2만명)
- 신기술 부문별('21, 8개 부문) 혁신공유대학*을 선정하여 온라인 강의 및 교육과정 공동 개발·활용
 - * 부문별 주관대학 및 참여대학(6개 내·외)으로 구성

- 신산업 분야 기초, 심화 및 학제 간 융합과정을 공동으로 개발·운영하고 학교 간-학과 간 제한 없이 누구나 수강하도록 개방
- 혁신공유대학에서 개발한 교육 콘텐츠를 전국 대학생(215만명) 및 일반 국민에게 온라인으로 무료 공개
 - ※ 글로벌 MOOC(cousera, edX 등), K-MOOC, 기존 인재양성 지원사업 등 기존 교육 콘텐츠 적극 활용 및 추가 개발

③ 학문 발전을 견인하는 석·박사급 고급인재 양성

- (석·박사 집중 양성) 4단계 두뇌한국(BK) 21 사업을 통해 쏘학문 분야에 걸친 대학원생 연구역량 제고 및 혁신 성장을 선도하는 고급 연구인력 양성
 - ※ 연간 19,000명의 우수 석·박사인력 집중 지원('20.9월~'27.8월)
- (박사 후 과정 지원) 정책적 육성 필요 분야는 신진 박사급 인력의 세계적 연구기관으로의 장기 연수를 지원하여 고급 연구인력 확보
 - ※ 감염병, AI, 소부장 등 전략 분야 공모를 통한 장기 해외연수(1년 → 3년) 지원('21~, 연 100명)
- (대학 연구기반 강화) 대학 부설 연구소의 법적 지위 명확화* 및 안정적인 연구 지원을 통해 학문 분야별 세계적 수준의 핵심 대학 연구소 육성
 - * ('20.下) 대학 중점연구소 종장기 발전방안 연구 → ('21.~) 학술진흥법 상 대학부설연구소 인정 기준 및 지원근거 마련 등 개정 추진
- (인문사회) 순수학문 연구 및 국가·사회 당면 과제의 인문사회학적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연구소* 지원('21, 신규 43개소 예정)
 - * 인문사회연구소 유형 : 전략적지역연구형, 순수학문연구형, 문제해결형, 교육연계형
- (이공) 대학중점연구소, 핵심연구지원센터 등 대학별 특성화에 맞는 전문 연구거점을 구축하고 전임연구원·테크니션 등 연구 일자리 확충

7. 고등 직업교육을 내실화 하겠습니다.

① 대학생 진로 및 취업 지원 확대

- (대학생 진로탐색 지원) 학생 스스로 진로탐색 활동을 수행하고 평가를 거쳐 학점을 받는 '대학 진로탐색 학점제' 지원 확대

※ ('20) 10교, 4억 → ('21) 20교, 8억

- 학생 개인별 맞춤형 진로설계 및 경력개발을 지원할 수 있도록 '진로탐색 표준모델'을 개발하여 대학에 보급('21~)

< 경력관리 및 취업준비 지원 대학 사례 >

△ (순천향대) 1학년부터 진로설계서 작성 및 진로준비 활동 누적 관리

△ (성균관대) 졸업자 취업, 대학원 진학, 취업 프로그램 참여 등 학과별 분석·관리

- (취업준비생 취업 지원) 졸업 유예 등 취업을 준비 중인 대학생이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우수 프로그램 발굴 및 연계 지원

- 신기술분야 등 유망 교육과정을 단기간에 이수할 수 있도록 우수 취업준비 프로그램* 발굴·안내

*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생에게 취업준비 프로그램을 안내하고, 해당 학생의 참여도, 만족도 등을 토대로 우수 프로그램 확산

② 재직자의 후학습 지원 강화

- (접근성 제고) 신산업 분야의 모듈화된 수준별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중 우수 콘텐츠를 성인학습자에게 온·오프라인 제공('21~)

※ 학점은행제 프로그램으로 재구조화하여 K-MOOC에 탑재

- 후진학 선도형 전문대학(혁신지원 III유형), 대학별 자체 프로그램 (재직자 전담과정, 산업체 위탁교육) 등을 토대로 콘텐츠 발굴

- (부담 완화) 재직자가 자신의 숙련 단계에 맞는 수준별 교육을 손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학제 간 연계·통합된 교육과정 운영 활성화

- ※ ① 직업계고-전문대, 전문대-일반대, 학사-석사 통합 계약학과 운영, ② 마이스터 대학 내 학습경험인정제, 집중이수제, 원격연수 등 재직자 친화적 학사제도 운영
- **고졸 재직자의 후학습에 따른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장학금 지원 확대**(중소·중견기업은 등록금 전액, 비영리기관은 등록금 1/2)
- ※ 희망사다리 장학금 II 유형 : ('20) 11,200명, 385억원 → ('21) 13,000명, 456억원

3 대학의 산업맞춤형 인력양성 내실화

- (대학생 현장실습 제도개선) 비상상황 시 현장실습을 실감형(VR·AR) 콘텐츠를 활용한 비대면 실습으로 대체 운영 허용('20.下~)
- 국가자격증 취득과 연계된 의무이수 실습(승선실습, 사회복지현장실습 등) 제도 개선
 - * 관련 법령상 규정된 의무 이수시간 충족을 위해 온라인 영상, 교내(대체) 실습 및 실감형 콘텐츠 활용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 추진
- 현장실습 지원비 지급기준 마련과 보험(상해, 산재보험) 의무 가입 등 학생의 권익과 안전망 강화를 위한 법적근거* 마련
 - * 「산학협력법」 및 「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(교육부 고시)」 개정 추진('20.下)
- (계약학과 운영 내실화) 실태조사('20.7월)를 통해 「대학의 산학협력 인력양성사업 효과성 제고방안」 마련('20.12월)
- 재교육형 계약학과에 대한 기업의 접근성 제고* 및 채용조건형 계약학과 학생 선발 과정에 약정기업 참여 강화('20.下)
 - * 권역제한 규정 완화(광역도내에 위치한 광역시는 동일 권역으로 간주)
- (기업 참여유인 제고) 산학협력 교육과정 참여 활동을 점수화*하여 인증제 등을 통한 범정부 차원의 인센티브 부여 방안** 마련('21~)
 - * 산학협력 마일리지 제도를 현장실습에서 산학협력 교육과정 전반으로 확대 적용
 - ** 공공입찰 가점(조달청), 정책자금(중기부), 세액공제(기재부), 세무조사 유예(국세청) 등

8. 전 국민의 전 생애 학습권을 보장하겠습니다.

① 대학의 평생교육 기능 강화

- (성인학습자 친화적 학사제도 구축) 학령기 학생 중심의 운영을 탈피하여 성인학습자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학습을 지속할 수 있는 유연한 학사 운영체제 구축
 - 각종 사회경험의 학점인정(학습경험인정제), 수업 기간의 다변화(다학기제, 집중이수제), 원격교육 활성화 등 추진
- (비학위과정 활성화) 성인학습자가 신기술 분야 등 고등교육 수준의 직무역량 개발 교육을 탄력적으로 이수할 수 있는 여건 마련
 - 원하는 시기·필요에 따라 적정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대학-산업체 협업으로 모듈화된 단기교육과정(3~6개월 단위) 개발 등 추진

② 평생학습-직업훈련 연계 및 경로 다양화

- (평생직업교육학원 지원) 평생교육 및 직업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평생직업교육학원의 근거 법령 개정 논의 추진
 - 「학원법」 상 규제 대신 「평생교육법」의 진흥·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
 - ※ 「학원법」 상 평생직업교육학원의 직업기술 분야를 「평생교육법」으로 이관
- (사내대학 육성) 사내대학 교육과정을 대학에 위탁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, 교육 참여대상을 확대하는 등 재직자 교육 활성화
 - 사내대학의 설립 및 운영요건을 완화하여 운영 활성화 지원
 - ※ 산업별 협의체의 사내대학 설립 및 동종 분야 다른 업체 직원의 입학 허용(「평생교육법」 개정 추진, '21~)

- 소규모 개별기업이 맞춤형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직원 대상 평생교육시설(가칭 '학점인정 소규모 사내대학')제도 신설 검토('22~)
- (학습-훈련 연계 기준 마련) NCS 능력단위를 참고한 학점은행제 표준교육과정 분석을 바탕으로 직업훈련과의 연계 기준 개발('20~)
 - ※ 학점은행제 표준교육과정 분석을 통한 교과목별 역량단위 도출 → 역량단위와 NCS 능력단위 간 매칭 → 연계 기준 도출
- 학점은행제 이수 결과(교육부)와 직업훈련과정 이수 결과(고용부)를 상호 인정하여 학위 및 자격을 효율적으로 취득할 수 있는 환경 조성
- (학습-자격 간 연계) 자격별 실제 업무난이도와 직무역량을 차별화 하여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현행 자격 및 학점 인정기준 개선
 - 국가기술자격에서 요구하는 NCS 능력 단위를 고려하여 현행 학점 은행제에서 '자격 → 학점 전환 기준'을 세분화·구체화 추진('24~)
 - ※ (기존) 자격증을 해당 전공의 학점(2~45점)으로 통전환 → (개선) 해당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역량과 매칭되는 교과목에 한하여 학점 인정

3 일-학습-삶 연계 강화

- (학습비 지원) 평생교육 이용권의 지원액을 늘리고*, 지원 대상도 저소득층에서 경력단절여성, 은퇴자, 취업준비생까지 확대 검토('21~)
 - * (현재) 연 35만원 → (개선, '21~) 연 70만원(회당 최대 35만원) → 규모 지속 확장

< 해외 사례 >

△ 싱가포르 SFC(Skills Future Credit) : 25세 이상의 국민 누구나 500 싱가포르 달러 (44만원)에 해당하는 크레딧을 부여, 해당 크레딧으로 정부 승인 학습과정 수강

- 평생교육훈련 참여 이력에 비례한 이용권 추가 지원('21~) 및 온라인 교육콘텐츠 간편 구매·결제 서비스 구축('24~)

- (학습-직무경험 연계) 국가역량체계(KQF)와 '학습-훈련 연계 기준'을 바탕으로 직무경험까지 학점으로 전환할 수 있는 체계 구축
 - 현장 직무경험 등 무형식 학습 결과를 표준화된 학습 성과(학점)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학점은행제에 학습경험인정제(RPL) 도입('24~)

4] 초고령사회 대비 은퇴·노년층 교육 제도화 추진

- (전 생애 학습 지원) 노인 인구 급증* 및 기대수명 증가에 따라 은퇴 이후에도 자존감 유지, 고립감 해소 및 관계 형성 등을 지원하는 사회적 시스템 필요
 - * '17.9월 고령사회(65세 이상 14%) 진입, '25년에 초고령사회(20%) 진입 예상
 - ※ (예) 대만 정부(교육부)는 '08년부터 4년 주기로 '노인교육 중·장기 방안' 수립
 - 노인 대상 교육과 복지 등을 연계하는 종합적 방안 마련을 위해 의견수렴, 정책연구 등 사회적 논의 추진
 - 학력, 소득, 생애이력 등이 매우 상이한 고령층의 특성을 고려한 개인 맞춤형 교육 패키지 개발

< 은퇴·노년층 맞춤형 교육(예시안) >

- △ 변화하는 사회에 대응하는 유연성 등을 배양하는 사회 이해증진 교육
 - ※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, 세대소통 교육, 다문화 교육, 양성평등 교육 등
- △ 노후 만족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취미·교양 중심 교육
- △ 개인의 지식욕 해소와 자아발전을 위한 학력·학위 취득 교육
- △ 사회 공헌에 따른 보람과 소득 유지를 위한 직업훈련 교육

- 다양한 노인교육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기존 교육기관 기능 개선 및 새로운 교육기관 발굴 추진

※ (예) 평생교육시설 기능 확대, 폐교 활용, 대학 정규과정 개방 등

“미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
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.”

[과제 9] 디지털 전환에 대응한 교육 기반 마련

추진 방향	주요 내용
디지털 환경 조성	(유·초·중등) K-에듀 통합 플랫폼 구축 → (고등·평생) K-MOOC 고도화, (가칭)평생배움터 (콘텐츠) 개방형 유통 → 안전한 활용 → 질 관리 강화
교육 목적의 효과적 활용	(학습 지원) 디지털 역량 + 학교의 디지털 혁신 ⇒ 빅데이터 기반 개별 맞춤형 학습 지원 (행정 과학화) 빅데이터 및 지능형 통계 기반 교육행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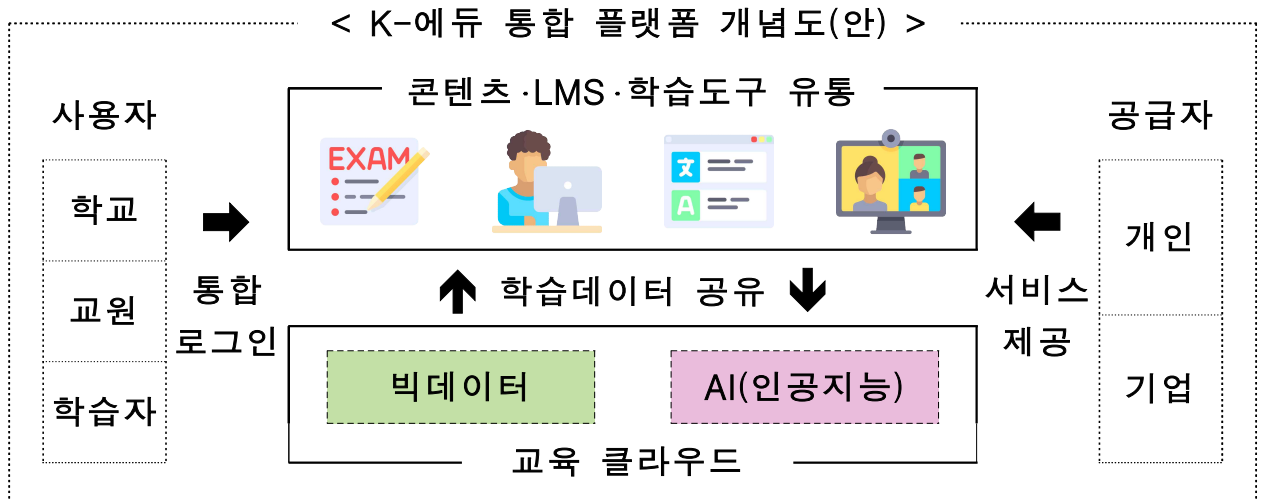
[과제 10] 미래형 교육 협력 거버넌스 개편

국가교육위원회 협력 + 교육자치 내실화	(국가교육위원회) 사회적 합의 기반 중장기 정책 수립 → (교육자치) 법령 정비를 통해 교육자치 착근 (교육부) 유연하고 효율적인 미래형 조직 전환
학교-지원청-지자체 간 협력 강화	(단기) 교육자치협력지구 등 협업 강화 → (장기) 교육지원청 현장성 및 독립성 강화
범부처 협업	→ 사회부총리 총괄조정 기능 강화

9. 디지털 전환에 대응한 교육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.

1 디지털 전환 인프라 구축

- (K-에듀 통합 플랫폼) 흩어져 있는 콘텐츠·학습관리시스템(LMS)·학습도구 등을 하나로 연결, 유·초·중·고에서 사용 가능한 플랫폼 구축
※ ('20.9월~'21.6월) ISP 수립 → (~'22) 구축 → ('23~) 서비스 개시



- 콘텐츠·LMS·학습도구 등이 플랫폼 내 표준을 기반으로 자유롭게 유통
- AI 및 축적된 학습데이터(학습자 특성, 학습시간, 출결 등)를 기반으로 학습자별 수요에 기반한 콘텐츠 제공 등 맞춤형 교육 구현
※ 장기적으로 학습활동 및 분석 결과를 NEIS와 연계, 과정중심평가 자료로 활용
- (차세대 K-MOOC) AI·빅데이터 기반 맞춤형 서비스 제공, 다양한 교수법(가상실습, 대화형 학습 등)이 가능하도록 K-MOOC 플랫폼 고도화('20.下~)
 - 국내 유사 서비스와의 연계 및 국내외 석학강의 제작, 해외 MOOC 플랫폼(Coursera, edX 등)의 글로벌 우수 콘텐츠를 선별하여 한국어 자막 제공('21~)
- (평생교육 플랫폼) 다양한 온라인 평생교육·훈련 콘텐츠를 맞춤형으로 제공, 학습·훈련 이력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'(가칭)평생배움터' 구축('21, ISP)
 - 각 부처·기관 온라인 교육콘텐츠 정보 통합 제공, AI 기반 맞춤형 학습설계, 학점 및 학위 취득 등 지원

② 온라인 교육 콘텐츠 생태계 조성

- (콘텐츠 유통 환경 조성) 공공·민간·개인(교원) 등이 참여하여 유·무료 교육용 콘텐츠를 개발·공유·확산하는 개방형 콘텐츠 유통 플랫폼 구축
 - ※ ('21) 시범서비스(가칭 'AIDU') 운영(공공·개인 콘텐츠 수집·연계) →
 - ('23) K-에듀 통합 플랫폼 내 연계 운영(민간 콘텐츠 활용을 위한 과금 체계 도입)
- (안전한 활용) 다양한 교육용 콘텐츠 등을 수업목적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저작물 제도개선
 - 저작권지원센터(KERIS)를 운영('20.7월~)하고 교육청 등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'수업목적 저작물 활용 범위 확대' 추진(문체부 협업)
- (포용성 강화) 언제·어디서든 원하는 학습을 할 수 있도록 교육적 배려대상 학생을 지원하는 콘텐츠 개발·보급
 - (장애학생) 장애 여부와 상관없이 콘텐츠 사용이 가능하도록 점역·수어·자막 등이 포함된 맞춤형 디지털 교육환경 조성
 - ※ 장애학생 원격교육 플랫폼 구축 및 AI 활용 음성인식 자막 프로그램 등 개발('21~)
 - (다문화학생) AI 활용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 개발(~'22), 다문화 교육포털(www.edu4mc.or.kr)을 통해 온라인 교육자료 제공
 - (고등·평생 학습자) K-MOOC와 KOCW, 매치업(Match業) 등의 연계를 통해 강좌 일괄 검색 등 수요자 접근성 제고('21)
 - ※ KOCW(대학강의·자료 등 콘텐츠 저장소), Match業(산업맞춤 단기직무능력인증과정)
- (콘텐츠 관리) 교육용 콘텐츠의 상호운용성 및 품질 제고를 위해 '콘텐츠 품질 관리 기준' 마련, 전담기관 운영 등 질 관리 강화
 - '교육콘텐츠 관리센터'를 지정, 교과서·온라인콘텐츠 질 관리·연수 등 실시

③ 디지털 활용 맞춤형 학습지원 체계 마련

- (디지털 역량 강화) 디지털 미디어 활용 역량 차이로 인한 교육 격차 및 디지털 격차 예방을 위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강화
 - (학생·교사·학부모) 학교 교육과정 연계, '학교미디어교육센터'('21~'22, 3개소) 및 학부모 연수 프로그램 등을 통해 미디어 활용 교육 지원

- (일반 국민)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연계 및 평생교육 프로그램 등을 활용하여 성인학습자 등의 디지털 역량 강화 지원
- (학교 지원 강화) 교원이 원격수업을 원활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필요한 학교에 '(가칭)테크매니저*' 배치 등 지원체계 조성
 - *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사업계획과 연계하여 시범 배치('21.下~)
- 시·도교육청별 여건에 맞게 전담부서*('21년 총액인건비부터 반영) 및 콘텐츠 제작 등을 지원하는 '(가칭)디지털교육지원센터' 설치 유도
 - * (예) 서울시교육청 '원격교육팀' 신설('20.9월) 등
- (빅데이터 기반 학습분석) 빅데이터 및 AI를 활용하여 학습자의 적성, 흥미, 수준 등을 분석하고 학습자별 맞춤형 학습 지원
 - 'K-에듀 통합 플랫폼' 구축과 연계하여 세부 방안을 마련하고, 장기적으로 빅데이터를 수집·분석·활용하는 '(가칭)학습 빅데이터 센터' 설립 등* 검토
 - * 교육 전문기관들의 기능 재설계를 통해 디지털 기반 교수학습을 전문적으로 지원

4 데이터 활용 교육행정의 과학화

- (빅데이터 기반 교육정책)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교육 현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수요자 맞춤형 교육정책 지원('21~)
 - 교육데이터 품질 제고 및 표준화를 위한 「(가칭)교육데이터 품질 관리 규정」 제정(~'20) 및 메타데이터* 관리체계 수립(~'22)
 - * 체계적 관리와 검색·활용을 위해 데이터의 구조, 속성 등을 표현한 자료
 - 교육부-시·도교육청-전문기관 협력을 통해 학생 등 개인 단위 데이터에 기반한 빅데이터 분석 모델 개발·확산
 - ※ ('20 시범) 학업중단 위기학생 대응모델, 맞춤형 독서활동 지원모델 등
- (지능형 교육정보통계) 데이터 취합 업무 경감 및 소셜 데이터 등 실증 자료에 기반한 교육행정 체계 마련('20.10월~)
 - 각종 자료 수집·집계, 주요 이슈에 대한 여론 동향 분석 등을 통해 정책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정책별 맞춤형 대응 지원

10. 미래형 교육 협력 거버넌스로 개편하겠습니다.

① 국가교육위원회와의 협력 및 교육자치 내실화

- (국가교육위원회 협력) 국가교육위원회를 중심으로 사회적 합의 기반의 장기적이고 일관된 교육정책 수립·추진
 - 국가교육위원회는 교육 비전과 10년 단위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수립, 교육부는 장기적 교육정책 방향에 맞추어 일관성 있는 교육정책 수립·집행
- (교육자치 안착) 유·초·중등 사무는 원칙적으로 시·도교육청과 단위학교로의 이양을 통해 교육자치 착근 추진
 - 학교교육의 보충성 원칙*에 따라 교육 자치를 촉진하는 법령 정비 과제의 종합·체계적 입법 방안 추진(전문위원회 구성, '20.9월~)
 - * 학교교육과 밀접한 사무는 교육(지원)청 및 학교에서 처리하도록 우선 배분
- (미래형 교육부 조직개편) 미래교육 거버넌스 개편에 부합하는 교육부 내부(실·국·과) 조직개편 등 검토 추진
 - 미래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유연하고 효율적인 조직으로 전환
 - 학생 안전, 교육격차 해소 등 국가 수준의 지원이 필요한 유·초·중등 사무와 고등·평생교육 및 학술연구 지원 등에 역량 집중

② 학교-지원청-지자체 간 협력 강화

- (협업 거버넌스) 현장 수요에 따른 과제발굴 등 협력 활성화를 위해 행안부·자치분권위원회, 시·도교육감협의회 등과 협업·제도개선 추진
 - ※ (예) 협력기구(지역돌봄협의체 등), 인사교류 및 지자체 전담 공무원제 활성화
- (교육자치 협력지구) 학교와 지역사회 협력을 기반으로 지역 내 교육혁신을 지원하는 '미래형 교육자치 협력지구*' 추진('20~)
- * 마을-학교 연계 우수모델 개발 : ('20) 11지구 → ('21) 22지구 → ('22) 33지구

- 기초지자체-교육(지원)청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, 지구 내 학교혁신 선도,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특색사업 개발 등 협력 우수모델 개발

< 미래형 교육자치 협력지구 협력 사례('20) >

- △ 방역 지원: (시흥) 열화상 카메라, 마스크, 소독제 등 학교 지원(32개교)
- △ 마을학교 운영 : (성북·강북) 온마을캠퍼스 협력센터, (순천) 마을교사와 학교 교사가 동천마을교육과정 개발, (울산 중구) “행복한 마을학교 꽃씨를 뿌리다”
- △ 마을돌봄 등 협력 : (부산 사하) 집으로 찾아가는 체험학습, (구례) 수해복구 지원

- (지자체 협력 초등돌봄) 학교는 활용가능교실을 제공하고, 지자체는 돌봄을 운영하는 협력사업 추진('21~)

※ '21년부터 2년간 총 1,500실을 협력모델로 추진(약 3만명 이용 가능)

< 지자체 협력 초등돌봄 사례 >

- △ (서울 중구) 흥인초(3실), 봉래초(2실), 광희초(2실), 남산초(3실), 청구초(4실)를 활용하여 지자체가 학교 내 돌봄을 책임 운영·관리('19.3월~)
- △ (충남 홍성) 홍성초(1실), 홍주초(2실)에서 홍성군이 직접 운영('18.12월~)

- (가칭, 마을 학습센터) 감염병, 자연재해 등으로 등교 곤란 상황 발생 시 학교·마을에 방역·안전이 보장된 학습·돌봄공간을 확보·제공

※ 시설 기준, 방역 지침, 운영·관리 매뉴얼 등 개발 추진(~'21)

- (교육지원청 기능 강화) 학교 자치 지원 및 기초지자체와의 연계·협력* 등을 위해 교육지원청의 현장성 및 독립성 강화 방안 검토

* (예) 학교복합시설 공동 운영, 위기학생 통합지원, 마을학교 및 마을돌봄 운영 등

3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부총리 역할 강화

- (범부처 협업) 사회부총리로서 중장기 정책 의제 발굴 및 총괄·조정 기능을 강화하여 범부처 협력 체계 공고화

- 실무조정회의*를 활성화하여 사회 이슈를 발굴하고 정책 대응방안을 마련, 사회관계장관회의 의제 유형 다양화(기획, 현안, 비공개 토의)

* 교육부 차관보 주재, 관계부처 국장 참석/ 격주(필요시 수시)로 운영

V. 향후 추진계획(안)

□ 현장·전문가 등과의 소통 대화 계속

- '포스트 코로나 교육 대전환을 위한 대화' 계속(~'20.12월)
 - 교원, 학생, 학부모, 시·도교육청 등 교육 당사자의 의견수렴을 통해 「10대 정책과제(안)」의 완성도 및 정책 간 정합성 제고
- 제2기 미래교육위원회('20.6월~) 등을 통해 전문가와의 소통·협력 강화
 - 전체 및 분과회의 등을 통해 미래교육에 대한 신규 의제 도출

□ 미래교육 전환을 위한 협력체제 강화

- 교육정책네트워크(KEDI 등 전문기관 참여) 및 대학에 설치된 정책중점연구소*의 미래 정책과제 발굴 기능 강화
 - * 교원정책(동국대), 교육복지(한양대), 학교안전(성신여대), 지방교육(충북대), 진로·직업교육(서울대), 고등교육(영남대), HRD정책(고려대), 산학협력(경상대) 등 15개
 - 민간의 창의적 연구 역량을 적극 활용하고, 연구소 간 연계·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효율적 연구수행 도모
 - ※ 부총리 주재 정책중점연구소 협의회 개최(10.8. 예정)
- 미래교육 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전담부서(추진단)를 설치·운영하고, 이후 새로운 교육 환경에 부합하는 교육부 내부(실·국·과) 조직개편 등 추진

□ 분야별 세부계획 마련 등 향후일정(안)

- 현장의 요구가 많고 우선순위가 시급한 과제는 기 발표
 - ※ 교육안전망 강화(8.11.), 고등교육 혁신 지원(9.9.), 평생교육·훈련 혁신(9.23.) 등
- 분야별 세부계획 마련 추진
 -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계획(안) : 11월
 - 고등교육 규제 혁신 방안(안) : 12월
 - 교원 양성체제 개편 방안(안) : '21.上
- '미래교육 정책과제(안)' 추진계획은 '21년도 업무보고에 반영